



일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증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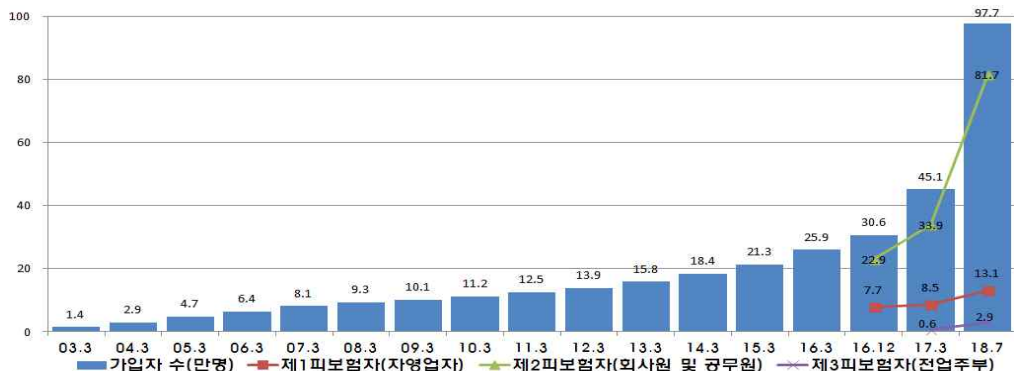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은 공적연금 역할 축소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적용범위를 2017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가입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적연금 역할 확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 2017년부터 적용대상이 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공무원, 전업주부 등을 중심으로 가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에도 기회균등과 사각지대 개선 차원에서 IRP 가입을 현행 모든 취업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연금 재정악화 등으로 공적연금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¹⁾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하여 보험료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사적연금제도로써 2002년에 시행됨
- 우리나라의 IRP와 유사하지만 일본은 적용범위를 2017년부터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최근 2년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그림 1〉 일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 추이



자료: 国民年金基金連合会(2018. 10), 個人型確定拠出年金の制度の概況을 기초로 작성함

1) 법률상 명칭은 개인형 확정기출연금(iDeCo)이며, 본고에서는 편의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호칭 함

■ 일본 국민연금기금연합회²⁾에 의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2017년 1월 이후 2018년 7월까지 1년 7개월 만에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자 수는 <그림 1>과 같이 2016년 12월 말 30.6만 명에서 2018년 7월 말 현재 97.7만 명으로 증가하여 최근 1년 7개월간 월 평균 3.3만 명 가입을 감안할 경우 2018년에 110만 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 가입률도 2016년 0.8%에서 2018년 7월 말 현재 1.5%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함

■ 가입자는 제1피보험자(자영업자)³⁾ 13.1만 명, 제2피보험자(회사원 및 공무원) 81.7만 명, 제3피보험자(전업주부 등) 2.9만 명으로 구성되어 제2피보험자가 전체 80%를 차지하는 등 회사원, 공무원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음

- 특히, <그림 1>과 같이 제2피보험자의 가입자 수가 2016년 12월 말 22.9만 명에서 현재 81.7만 명으로 증가하여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제2피보험자 가입자는 <표 1>과 같이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가 52.2만 명으로 전체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공무원 19.1만 명, 직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근로자 10.5만 명으로 구성됨

〈표 1〉 일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와 가입률(2018년 7월 말 기준)

구분	제1피보험자	제2피보험자				제3피보험자	전체
	자영업자	A근로자	B근로자	공무원	소계	전업주부 등	
가입자(만 명)	13.1	52.2	10.5	19.1	81.7	2.9	97.7
가입률(%) ²⁾	0.8	2.4	0.7	4.3	1.9	0.3	1.5

주: 1) A근로자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 B근로자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2) 공적연금 피보험자 수 기준임

자료: 국민연금기금연합회(2018. 10), 個人型確定拠出年金の制度の概況을 기초로 작성함

■ 가입률은 제1피보험자 0.8%, 제2피보험자 1.9%, 제3피보험자 0.3% 수준으로 제2피보험자가 가장 높음(〈표 1〉 참조)

- 특히, 제2피보험자 가입율은 공무원 4.3%,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 2.4%,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 0.7%의 순으로 공무원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자 중에서 법정 보험료 납입 한도액(보험료 소득공제한도액)⁴⁾까지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 비중은 공무원이 89%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관리공단의 역할을 하는 기구임

3) 일본에서 사회보장제도와 퇴직연금 가입자 공식 통계는 국민연금 피보험자 구분인 제1·2·3피보험자 기준으로 발표됨

4) 일본은 공적·사적연금제도에서 직종별 가입되는 연금제도 종류가 상이하므로 전 직종의 세제혜택 형평성 차원에서 직종별 차등화 된 보험료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됨. 예컨대 자영업자의 경우 기초연금만 적용대상이므로 근로자에 비하여 부족한 세제혜택을 다른 연금제도에서 보충하는 방식의 소득공제제도가 운영됨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다음으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81%,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5%, 전업주부 55%, 자영업자 20%의 순으로 높음
-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은 보험료 한도액 6.8만 엔이 다른 연금제도와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임

〈표 2〉 일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법정 월보험료 납입 한도액과 납입 비중

구분	제1피보험자	제2피보험자					제3피보험자
	자영업자	A근로자	B근로자			공무원	전업주부 등
			DC가입	DC+DB	DB가입		
보험료 한도액(월)	6.8만 엔	2.3만 엔	2만 엔	1.2만 엔	1.2만 엔	1.2만 엔	2.3만 엔
한도까지 납입 비중	20%	55%	81%			89%	55%

주: 일본은 보험료 납입 한도액까지 보험료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자료: MIZUHO(2016.5), 型確定拠出年金法の成立; 大和総研(2018), 個人型確定拠出年金(iDeCo)の加入状況を 기초로 작성함

■ 일본의 최근 가입자 증가 현상은 2017년부터 실시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적용범위 확대가 주요 요인임

- 일본의 사적연금 역할 확대 정책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적용범위를 2017년부터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전업주부 등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근로자 납입금에 고용주(100명 이하 사업장)가 매칭하여 납입하는 소규모사업주공제제도가 실시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규 가입에 영향을 주었음
- 이러한 정책요인은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중소기업 근로자(약 28만 명), 공무원(약 19만 명),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약 10만 명)의 순으로 신규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 일본의 공적연금 역할 축소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정책은 시행 후 13년간 약 30.6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를 2017년 개정 후 1년 7개월 만에 약 100만 명으로 성장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령층, 영세사업장 근로자, 전업주부 등 일부 연령층과 일부 직종의 가입이 미진하여 향후 이들의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일본의 정책과제로 대두됨
- 향후 국내에서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기회 균등과 노후소득 사각지대 개선 차원에서 IRP 적용범위를 전업주부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